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19년 9월 19일(목)

CONTENTS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IB 2019-07)

CONTENTS

- I.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1
 - II.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11
 - III.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 20
-

발 행 인: 김세연

편 집 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원표, 김창배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19년 9월 19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9월 3째주)에는 미국발 한-일 핵무장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비건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발 ‘한-일 핵무장론’의 쟁점과 대책 등에 대해 분석했으며, 제2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3편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바,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제1편: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이윤식 연구위원)

최근 비건 대표가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확대. 물론 진의는 ‘핵무장 용인’이 아닌, 북한의 ‘조속한 협상 재개’와 중국의 ‘적극적 협상 중재’를 압박하려는 對北-對中 동시 압박 차원으로 보임. 그럼에도 북핵 고도화를 막아낼 대안이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發 핵무장론’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움이 있음. 특히, 최근 美의 핵운용 지침이 ‘제한적 핵사용’과 ‘한미일 핵공유체계’ 구축으로 바뀌고 있어, 한반도 핵균형을 바라는 우리에게겐 절호의 찬스. 이에 文정권과 무관하게, 우리당만의 실현가능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

제2편: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허찬국 前 충남대 교수)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역조가 표면적 요인이나 근본적으로는 기술 패권의 주도권 전쟁. 미국은 중국이 큰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불인정하는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이러한 구조적 갈등 요인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적 봉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소지가 많음.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참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책 강구가 시급함

제3편: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함 (2018.8).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개의 개선안에는 재정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2018.12).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음(2019.8). 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연금보험료를 인상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 특히, 연금보험료를 인상은 가능한 조기에 하는 것이 재정효과성과 세대형평성을 높이는 방향

1.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1)

작성: 이윤식 연구위원 (☎ 02-6288-0548)

최근 비건 대표가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확대. 물론 진의는 ‘핵무장 용인’이 아닌, 북한의 ‘조속한 협상 재개’와 중국의 ‘적극적 협상 중재’를 압박하려는 對北-對中 동시 압박 차원으로 보임. 그럼에도 북핵 고도화를 막아낼 대안이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發 핵무장론’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움이 있음. 특히, 최근 美의 핵운용 지침이 ‘제한적 핵사용’과 ‘한미일 핵공유체계’ 구축으로 바뀌고 있어, 한반도 핵균형을 바라는 우리에게겐 절호의 찬스. 이에 文정권과 무관하게, 우리당만의 실현가능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

1. 문제의식

- 최근 스티브 비건 美대북정책 대표의 ‘한-일 핵무장론’이 촉발되며, ‘미국發 한·일 독자 핵능력 보유’ 관련 논란이 제기
 - 9.6(金) 미시건大 강연에서 비건은 키신저 박사를 인용,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즉,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실패하면, 동아시아는 핵확산(핵도미노)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
 - 같은 날, 美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미국의 핵억지력에 신뢰가 부족하면 한-일은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
 - 한일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同 상황이 장기화되면 핵무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

1) 同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2019.8.14.)”,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2019.8.12.)”,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2019.3.14.)” 등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해 작성함

- 방점은 ‘한-일의 핵무장’ 용인이 아니라, 북한엔 협상의 ‘조속 재개’를, 중국엔 협상의 ‘적극 중재’를 압박하려는 對北·對中 동시 압박 차원
 -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엔 소극적이면서, 각종 미사일 도발을 통한 강경 행보를 걷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성 압박
 - ※ 올해 10차례 발사: ①5.4(호도반도, 수십발), ②5.9(구성, 2발), ③7.25(호도반도, 2발), ④7.31(원산, 2발), ⑤8.2(영흥, 2발), ⑥8.6(과일, 2발), ⑦8.10(함흥, 2발), ⑧8.16(통천, 2발), ⑨8.24(선덕, 2발), ⑩9.10(평남, 2발)
 - 동시에 중국에겐 ‘한·일 핵무장이란 최악의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미북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 대북 영향력 행사에 나서라’는 경고
- 그럼에도 북핵 고도화를 막아낼 해법이 없는 우리의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發 핵무장론’을 그냥 무시하기엔 아쉬움이 있음
 -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형무기 3종을 완성’하는 등 핵전력 증대를 가속화
 - ※ 신무기 3종세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에이태킴스(ATACMS·전술 지대지미사일), △신형 초대구경 방사포 등
 - 한편,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핵전략이 중거리미사일 배치(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 핵균형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
 - 핵운용 방향도 기존 핵전쟁이나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반격한다는 것에서 “재래식 전쟁에도 핵을 쓸 수 있다”는 방침으로 변경
- 그러나 문제는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선 미국이 핵무장이든 핵공유든 그 무엇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 오히려 文정부는 △3축체계 붕괴, △GSOMIA 파기, △축소지향형 국방개혁, △연합훈련 축소 등 자체 무장해제를 가속화 중임
- 따라서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당만의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움직이는 것이 필요

2. 최근 美 핵전략 변화 동향

○ 미국의 핵전략 및 핵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은 順으로 변화·발전

- 2018.1月 NPR, ‘유연한 맞춤형 억지전략’ → 2019.6月 합참 핵운용,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 → 7.25 NDU Report, ‘한미일 전술핵공유’ 구축 → 8.3 에스퍼 국방,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 9.6 비전, ‘한일 핵무장 가능성’ 등

①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 NPR이란 美 국방부가 8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핵전략 보고서로서, NSS(국가안보전략)와 NDS(국방전략)와 함께 3대 전략보고서

-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첫 발간한 후 부시 행정부(2002)와 오바마 행정부(2010)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가 총 4번째로 발간
- 한편, NSS는 美 국가안보의 대전략을 담은 보고서로 NDS와 NPR의 작성 기준을 제공, 동시에 NDS는 국방전략 및 전쟁수행 개념, 그리고 전력구조 등을 담은 문서

○ <2018 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의 수립, 목표와 전력태세 등을 제시

-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무기없는 세상’에 기반해 핵확산 및 핵 관련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안보전략을 위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
- 반면, 트럼프 정부는 쏘세계 핵무기가 제거될 때까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저장도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중국, 러시아, 북한(이란)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해 강력하게 억지
- ‘유연 맞춤형 핵억지전략: 상황과 맥락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핵억지(flexible, tailored nuclear deterrence strategy)에 초점

② 美 합참, ‘핵운용(Nuclear Operation)지침’ 발표

- 지난 6.11(火) 美 합참이 발간한 ‘핵운용’ 지침에 따르면, “적성국과 전투 중에 제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
- 즉,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핵무기 사용을 위한 절차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적시
- 효과적인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핵무기 사용의 4가지 조건을 제시
- ※ △핵 및 비핵 공격 억제,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 △억지가 실패하면 미국의 목표를 달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등

③ 美 국방대학교(NDU), ‘한미일 전술핵공유’ 리포트

- ‘21세기 핵억지력: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북한편)’ 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작성
- 북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 태세에 심각한 위협으로 진단하며, 대응책으로 NATO 수준의 ‘한미일 핵공유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된 한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비전략(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④ 美, INF조약 폐기 후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표명

- 8.2(金)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INF 조약을 폐기
 - 그러나 실제 이유는 미-러가 협정에 묶여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 엄청 많은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
 - 미국은 중국의 핵미사일 때문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위협에 처해 있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위험하다고 주장
 - 이에 미국은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국, 일본 등에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
 - 8.3(土) 에스퍼 美 국방장관은 “몇 달 안에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
- ※ NYT도 보도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이내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3. 핵무장의 쟁점과 안보 현실

□ 韓 핵무장 관련 여러 쟁점들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남북한 핵균형론은 크게 △핵무장론, △핵공유론, △핵주권 회복 등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① 핵무장론: 독자 핵무장, 조건부 핵무장
-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 파탄, △국내 정치경제적 한계, △국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방안

-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파탄은 불가피하며, 중립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 다분
- 또한, 2018년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약 81%(수출 43.1% + 수입 37.7%)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G20 국가 중 최고
 - 특히, 국제제재가 가해지면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국의 내구력을 취약하게 만들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이념대결을 촉발

○ 한편, ‘조건부 핵무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원해서가 아닌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므로, 북핵 해결시 즉각 폐기가 원칙

- 대다수 국민들이 한반도 핵균형과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도 핵무장 내지는 전술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 핵무장 필요: KBS 조사(2017.9月) 78.9%, 중앙일보 조사(2018.4月) 68%

- 특히, 조건부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립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체계 구축 관련 對美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음

② 핵공유론: 전술핵 재배치, 한미일 핵공유체계 구축

○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 이후 정치, 군사적 이유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

- 군사적 차원에서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활용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므로, 전술핵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꿈에서 전략폭격기(B2, B52, B1-B)에 탑재한 핵무기로 2시간이면 북한 공격 가능’, ‘美 본토 배치된 미니트맨-3으로 30-40분이면 북한 공격 가능’

-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핵전략 및 핵운용 방침의 변화로 전술핵 재배치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통한 남북한 핵균형의 가능성이 열림
- 한편, 미국이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할지 알수 없지만, 한미일이 핵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역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건 분명
- 한일관계를 감안해 NATO처럼 동맹국들이 직접 핵무기를 투사하는 방식이 아닌 美軍에게 맡기는 탄력적 방식을 선택
- 다른 대안으로 괌에 전술핵(B61-12)을 배치해 놓고, 한·일 전투기들이 괌에 가서 정기적 핵무기 장착 훈련을 하는 것도 방법

③ 평화적 핵주권 회복

-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일 핵공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나머지 대안으로 '평화적 핵주권'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미국은 반대하지만 NPT 위반이 아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 위기시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만이라도 보유
- ※ 2015년 개정에서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문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는 일본에 비해 여전히 미진
- 추후 동맹외교 강화를 통한 지속적 대미 설득을 바탕으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 핵잠재력의 장애요소를 조정하는데 집중

□ 문재인 정부 하 안보 현실

- 현 文정권 하 안보 현실은 핵무장이나 핵공유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 보다는 오히려 자체 무장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분위기

-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사실상 중단과 전작권 조기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적극 와해시킴

〈표 1-1〉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폐지 현황

훈련명	시기	훈련내용	현 상태
키리졸브연습	3월	전시대비 지휘소 연습	폐지 (규모/기간 축소된 연습 대체)
독수리연습	3~4월	전시대비 증원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폐지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축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8월	전시대비 정부 및 한미연합 군사 종합연습	폐지 (韓단독 을지태극연습으로 분리 및 축소된 훈련으로 대체)
쌍용훈련	4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	폐지
맥스썬더	5월/10월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	폐지 (연합편대군 훈련으로 축소)
비질런트에이스	12월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	유예(폐지유력)
케이맵(KMEP)	연중 약 20회	국지도발 대응 한미연합 대대급 해병훈련	규모/횟수 축소

-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미래의 안보 수요와 한국軍 능력 (군기강 해이, 병사들의 유약화 등)에 심각한 공백 발생
 - 이와 함께 GSOMIA 파기로 인한 한미일 공조체계의 균열과 한국형 응징보복인 3축체계를 포기하며 북핵위협 노출이 심화
- 이렇게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든, NATO 수준의 ‘한미일 핵공유체계’를 구축하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文정권 하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현실

4. 실현가능한 대책(feasibility plan)

-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 핵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 ‘미국궤 핵무장론’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절호의 기회
 - 1~3차는 기본적 핵분열 실험이었고, 4차는 소형화를 위한 증폭핵 분열 실험인 것으로 분석
 - 5차는 다양한 미사일(스커드 B·C, 노동, SLBM 등)에 탑재 가능한 표준화된 탄두개발 실험이었고, 6차는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 ※ 현재 북한은 탄두 위력 향상 및 표준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과 대기권 재진입 및 정밀 유도기술 확보를 위한 ICBM 시험발사 필요
 - 그리고 운반수단 역시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2017년 화성 12, 14형에 이은 화성 15형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핵무력 완성과 핵보유국(11.30)을 천명
- 특히,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총 10차례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형무기들을 완성’하는 등 핵전력 증대를 가속화
 - 10차례 단거리미사일 발사: ①5.4(호도반도, 수십발), ②5.9(구성, 2발), ③7.25(호도반도, 2발), ④7.31(원산, 2발), ⑤8.2(영흥, 2발), ⑥8.6(과일, 2발), ⑦8.10(함흥, 2발), ⑧8.16(통천, 2발), ⑨8.24(선덕, 2발), ⑩9.10(평남, 2발)
 - 이 과정에서 요격이 어려운 신형무기 4종세트, 즉 △이스칸데르(KN-23), △지대지 전술유도미사일, △초대구경 방사포, △SLBM 3기 장착 신형잠수함 등을 개발

〈표 1-2〉 요격이 어려운 북한 신형무기 4종세트

이스칸데르, KN-23	SLBM 3기 장착 신형 잠수함	신형 대구경방사포	신형 지대지전술 유도미사일
사거리 690km 고도 50~60km 길이 7.3m	배수량 3000톤급 길이 70~80m 사거리 2500km	사거리 250km 고도 30km 구경 400mm	사거리 400km 고도 48km 속도 마하 6.1
특징: 요격 회피 기동	특징: 게임 체인저	특징: 동시발사 가능	특징: 축구장 3~4폭발

○ 따라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공포의 균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반도 핵균형’을 강력하게 주장

- ① 미국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청
- ② 한미일 전술핵공유 내지 한미간 핵공유체계 구축을 요청
- ③ 미국의 강화된 핵우산 내지 우리의 핵잠재력 확보방안 강구

○ 다만, 외교안보 사안의 특성상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특히 文정권 하에서는 상기 사안 중 어떤 것도 현실화 가능성이 없음

- 이에 對美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접촉하거나 의원외교의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킹과의 관계 유지·강화를 적극 추진
- 對국민 차원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없이 핵능력을 무한 고도화시켜 가고 있으므로, 자구책 차원의 한반도 핵균형이 필수적임을 홍보
 - 구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한미일 핵공유, 핵잠재력 회복 등임을 강조
- 黨차원에선 수권정당으로서 우리당만의 핵정책을 조속히 확정짓고, 그에 맞는 추진전략을 세팅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가야 함

II.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작성: 허찬국 前 충남대 교수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역조가 표면적 요인이나 근본적으로는 기술 패권의 주도권 전쟁. 미국은 중국이 큰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불인정하는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이러한 구조적 갈등요인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적 봉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소지가 많음.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참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책 강구가 시급함

1. 오락가락(on again, off again) 미·중 무역협상

□ 10월 초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국은 유화적 조치 발표

○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연기

-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약 29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15일로 연기

○ 중국은 미국 농산품 수입을 재개할 움직임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월 12일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들이 가격 책정 문의를 시작했음을 발표

□ 10월 협상이 포괄적 합의로 이어질지 낙관하기는 이름

○ 유화적 조치는 양국 정부가 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
 - 2018년 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도가 하락했음을 보여줌
 -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내년 대선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남²⁾

 - 중국의 美 농산물 수입은 1년 사이 급등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주요한 원인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며 공급량이 크게 줄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로 사료값도 올라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사이 40% 가까이 양등
 -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중국 전체 육류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 ※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

□ 트럼프 정부, 규범에 의거한 개방형 다자무역체제 포기

-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
 - 1980년대 초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 것은 다자주의 체제하에서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행위 탓이라고 해석
 - 자동차, 철강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며 쇠락한 공장지대 유권자들이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의 이러한 적대적 해석에 동조한 것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함

2)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은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7월초 44%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보도.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

○ TTP 탈퇴와 NAFTA 재협상, WTO 비판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공식 탈퇴
 - 오바마 정부는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을 아우르는 TPP협상을 주도하며 마무리 단계만 남겨둔 상태였음
 - 참여국이 많고, 깊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지역무역 협정인 TPP 탈퇴로, 미국 조야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19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견지
 - NA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를 긴밀히 연결 하여 북미 3국간의 분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주춧돌 역할
 -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 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멕시코에 뺏겼다고 강조
 - 작년 8월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3국간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USMCA(U.S. Mexico Canada Agreement)를 타결³⁾하였으나 그 내용은 NAFTA와 대동소이(大同小異)

- 트럼프 정부는 다자무역체제를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의 후신)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입장 고수
 - 미국은 2차 대전 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세계경제 질서의 일환으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통해 규범을 중시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구축하였음

3) USMCA는 현재 미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2. 가시화된 미·중 갈등의 피해

□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 트럼프 정부의 '산탄총'형 동시다발 관세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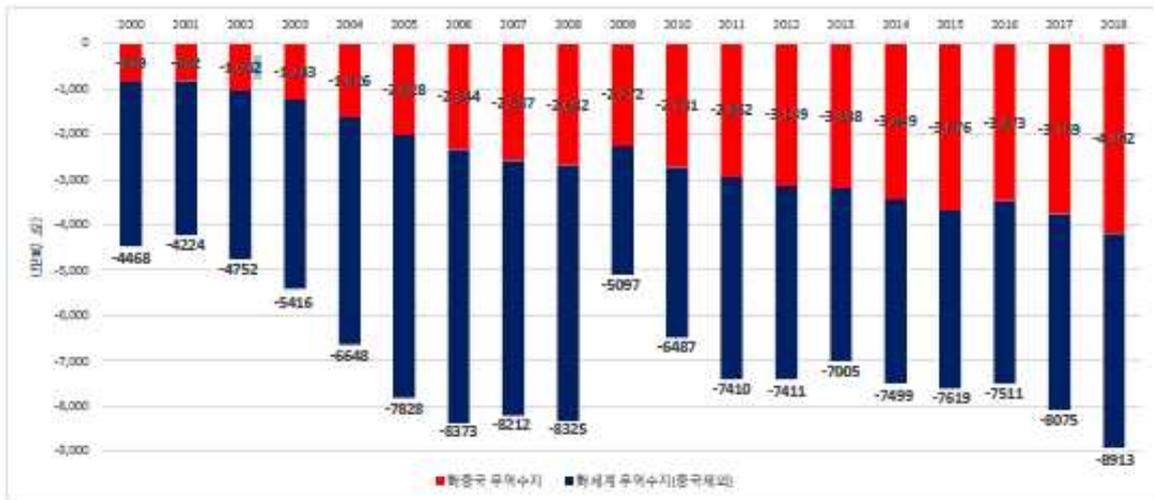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취임 후, 1차적으로 태양전지 패널, 세탁기를 시작으로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수입 제한 쿼터를 연이어 시행⁴⁾
- 이런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EU 회원국, 캐나다, 멕시코 등 광범위한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취해짐
-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WTO 개입을 무력화 시켰으며 상대국들의 반발을 초래

○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이 표적

-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50%에 근접하는 對중국 적자를 문제시하는 시각은 미국 내에 상존
- 2017년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관세부과가 시작했으며, 중국은 즉각 미국 수입품에 대해 비슷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음
-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는 감면·연기했으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
- 미국의 통상법 201조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301조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파악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4) 1차 품목들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 관세를 부과, 알루미늄과 철강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부과. 아울러 일부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 등 완화 조치를 차별적으로 시행. 우리나라는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부과

[그림 11-1] 2000~2018년 미국의 무역수지



자료: KITA 통상리포트 2019 VOL.01

- 2018년 초 미국 정부는 중국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신기술개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 ‘주고 받기’ 확산

- 양국은 ‘관세부과 → 유화적 조치 → 협상 미봉’의 순환을 되풀이하며 점점 갈등의 강도를 높여 왔음

〈표 11-1〉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추이

구 분		미 → 중	중 → 미
1차	2018.7월	금액(달러)	340억
		품목(개)	818
		관세율	25%
2차	2018.8월	금액(달러)	160억
		품목(개)	279
		관세율	25%
3차	2018.9월	금액(달러)	2,000억
		품목(개)	5,745
		관세율	10%
4차	2019.5~6월	금액(달러)	2,000억
		품목(개)	5,745
		관세율	10%→25%

자료: IIT Trade Focus 2019년 24호, 무역협회

- 트럼프 정부 초기, 무역역조 해소 방안이 미·중간 주된 논의사항이었던 것이 점점 대중 강경파 의제인 포괄적 이슈로 확대되어 왔음
 - 백악관과 정부 내에 미·중 무역분쟁의 거시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확산에 부정적인 온건파와 강경파가 공존⁵⁾
 - 올 5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양국 간 잠정적 합의안이 마련되며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의 반대로 무산
 - 합의가 불발된 올 6월 무역협상에서 거론되었던 미국의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가 무역분쟁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줌
 - 무역 불균형,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보호, 정부 보조금, 관세/비관세 장벽, 사이버 해킹, 시장진입 제한, 환율 등

□ ‘America First’의 피해자는 미국기업과 소비자

-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의 행태는 개방된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인상에 따른 직간접 비용 상승의 체감효과가 큼
 -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 생산설비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데 선두 주자였음
 - 중국내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산은 2015년 3,900억 달러 수준으로 2009년(1,9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으며, 이들 기업들은 2015년 22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⁶⁾
 - 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는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미국 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킴

5) 대표적 강경파로 피터 나바로(국가무역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USTR대표), 온건파로 스티븐 므누신(재무장관), 래리 커들로(국가경제위원장)
 6)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18.5.3

- 저가 수입생필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하게 기여 하였음
- 미국 내 여러 연구 기관들은 對중국 관세가 가계와 거시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뉴욕 연지준(FRB)은행은 對중국 관세로 가구당 연간 약 8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추정
- ※ 워싱턴에 위치한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對중국 관세의 부정적 효과로 일자리가 약 20만개가 줄어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2018년 감세의 긍정적 거시경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발표

□ 개방된 다자무역체제 이용한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 고도화

○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는 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의 표출

- 산업 고도화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산업기술 패권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주도권에 대한 도전
- 이 관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는 미국에게 심각한 문제
- 중국 기업이 합병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외국인투자위협조사 현대화법)을 2018년에 개정⁷⁾

○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의 시장경제

-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민간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 고도화는 정부가 주도
- 1980년대 말 개혁개방 초기 민간 주체들의 이윤동기에서 경제발전의

7) 미국은 작년부턴 중국의 대표적 5G기업 화웨이(Huawei)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음

동력을 찾았음⁸⁾. 하지만 고도 성장기 이후 점점 정부 주도형 경제운영 체제로 이행

-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 중심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정부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움

○ 구매력이 급증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배경으로 우월적 교섭권을 행사

- 14억의 소비자와 빠르게 늘어나는 구매력을 내세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불인정 등 고압적 정책을 유지
- 중국내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對중국 강경 자세를 내심 반기면서도 시장 접근이 제한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

○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시장 접근을 보장하도록 중국 법 개정을 요구

- 이런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으로 간주, 반발

3.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 방안 필요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에 대한 대비

-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이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공
- 미국의 對중국 관세 대상에 중간재와 자본설비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8) 초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평등조차 미루어 두자는 선부론(先富論)으로 요약

미국 및 중국과 이어지는 공급망의 중요한 참여자인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脫중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는 방안도 택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

- 경우에 따라 국내와 해외 생산 거점간의 생산량 조정, 비용 감축을 위한 조치 등도 필요

□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기술력 굴기(崛起)에 대비

○ ‘중국제조 2025’의 지향점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여 향후 중국과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한 점을 유념하면서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우월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함

□ 세계경제 불안 고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비

- 경기침체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 지원 역할 강화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

- 미·중 간 통상마찰과 그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로 설비투자는 이미 1년 가까이 부진한 상태인데, 장기화 될수록 첨단기술투자가 특히 위축될 가능성

Ⅲ.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작성: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 된다고 함(2018.8).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개의 개선안에는 재정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2018.12).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음(2019.8). 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 특히,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가능한 조기에 하는 것이 재정효과성과 세대형평성을 높이는 방향

1. 국민연금의 재정위험

-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증가하고(최대 적립기금 1,778조원),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3차 재정계산(2013년)과 비교하여 보면, 연금재정 수지적자와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짐. GDP 대비 적립기금은 GDP 대비 48.2%(2034년) 까지 증가한 후 감소

〈표 Ⅲ-1〉 3·4차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비교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4차(2018)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3차(2013)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 부과방식비용률은 장기적으로 29%대 수준까지 도달하며,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9% 수준에 접근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적립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용)

〈표 Ⅲ-2〉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단위: %)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4차(2018)	5.2	9.0	14.9	20.8	26.8	29.7	29.5	28.8
3차(2013)	5.2	8.0	12.8	17.4	21.4	22.6	22.6	23.6

자료 : 제4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결과보고, 2018.8

-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서는 재정안정화와 관련하여 복수의 안을 제시

-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인상하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은 즉각 인상.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1案)

※ 적립배율 1배는 적립금 규모를 국민연금 지출 규모와 같게 유지함을 의미

- 1단계로 소득대체율은 40%(현행) 유지, '19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13.5%까지)하고, 2단계로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계수 도입 등으로 약 4%의 보험료율 효과 모색할 것을 제안(2案)

※ 기대여명계수는 연금 자동 조정 방식으로 국민 평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기대여명계수를 곱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인하하는 방식. 생애기간에 받는 연금액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월 수령 연금액을 낮추는 방식

2.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4개의 선택 대안을 제시

- 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
- 2안은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 3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 보험료율은 12%
- 4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보험료율은 13%

〈표 III-3〉 정부 대안별 요약과 효과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국민+기초 실질급여액 ⁹⁾	86.7만원	101.7만원	91.9만원	97.1만원
실질대체율	34.7%	40.7%	36.8%	38.8%
소진시점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GDP 대비 최대 적립기금 ¹⁰⁾	2034년 (GDP 대비 48.2%)	2034년 (GDP 대비 48.2%)	2039년 (GDP 대비 58.3%)	2039년 (GDP 대비 58.7%)

자료: 보건복지부, 2018.12

9) 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한 금액 기준(연계 금액 고려)

10)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

- 4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충족시키는 방안은 없음
 - 1안은 2057년 적립기금 고갈, 2안은 국민연금 재정불안은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 인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가중(GDP대비 3% 부담에서 4% 부담으로 증가)
 -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킴. 보험료율은 인상하나 적립기금 고갈연도는 5~6년을 연장시키지만, 적립기금 고갈후 부과방식 비용율은 3%p를 높임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 특위에서는, 노동계 및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 3안을, 경영계는 정부 1안을,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즉각 1%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新인구추계를 사용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고갈연도는 동일하나, 부과방식 비용률은 3%p 상승
-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로 하락하여 재정 재계산시 준거가 되었던 합계출산율 1.38을 크게 하회하였고, 저위 시나리오 기준인 1.05보다도 낮아, 재정우려가 더욱 심화됨
- 206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율은 30.3%로 높아짐. 이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3%로 인상하여야 연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

[그림 Ⅲ-1] 新인구 전망(2019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예측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 보고자료(김용하 위원), 2019.4

□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제1차 원인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에 기인

-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 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으로 나타남. 국민연금의 현행 급여 수준에 상응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7.1%로 분석됨
- 이는,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지속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17.1%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시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

[그림 Ⅲ-2] 국민연금 수익비와 균형보험료율



자료: 김용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보건사회연구』, 2019.6

□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제2차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의 장기화

○ 2015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성 79.0세, 여성 85.2세이나, 2060년에는
남성 87.8세, 여성 91.2세로 연장됨.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로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그 이하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

○ 연금수급기간이 남성은 9년, 여성은 6년을 더 수급하게 됨

〈표 Ⅲ-4〉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하락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88	
4차 (2018)	합계출산율(명)	1.24	1.24	1.32	1.38				
	기대수명 (세)	남	79.0	80.3	82.7	84.7	86.3	87.8	90.8
		여	85.2	86.2	87.8	89.1	90.2	91.2	93.4
3차 (2013)	합계출산율(명)	1.28	1.35	1.41	1.42				
	기대수명 (세)	남	78.2	79.3	81.4	83.4	85.1	86.6	-
		여	85.0	85.7	87.0	88.2	89.3	90.3	-

자료: 제4차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결과보고, 2018.8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로 볼 때, 인구부양비율에 의하여 연금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부과방식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을 초과하게 되어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없어지게 됨

※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은 보험료 대비 수급액의 비율(수익비)을 1.0 이상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의미

-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립적 성격을 가능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 40%로 하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선진 각국의 연금급여율과 비교할 때, 40% 수준 이하로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수익비가 1.0이 되는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연금급여율을 현행제도로 유지하고, 연금보험료율은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하한 수준인 17%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20년 간 8%p 인상: 勞·使가 각각 매년 0.2%씩 추가부담)
 -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2033년 65세를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높여야 재정안정화 가능
-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2100년까지 적립기금 유지 가능
- 적립기금 고갈이 2057년에서 2102년으로 연장 가능하고,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下限에서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으로 2065년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은 29.4%이지만, 적립기금의 존재로 17%의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하에서 제도 운영 가능

〈표 Ⅲ-5〉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가격)

연도	급여지출	총수입	보험료수입	수지차액	적립기금
2020	26,609	81,737	46,962	55,128	754,655
2025	43,483	119,877	70,473	76,394	1,092,147
2030	66,768	169,704	99,211	102,936	1,555,316
2035	102,515	226,510	133,506	123,995	2,130,324
2040	149,219	299,730	175,881	150,511	2,829,559
2045	199,801	356,335	201,481	156,534	3,596,909
2050	264,464	418,747	229,388	154,284	4,379,798
2060	430,292	528,504	280,654	98,212	5,680,812
2070	639,425	609,305	354,300	-30,120	5,908,007
2080	793,886	667,875	444,801	-126,011	5,118,389
2090	917,566	718,588	573,712	-198,978	3,342,162
2100	1,121,851	742,358	708,933	-379,493	604,295

자료 : 김용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보건사회연구』, 2019.6

□ 연금보험료를 인상은 가능한 조기에 하는 것이 재정효과성과 세대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임

- 동일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미래 1세 연령 인구수(20만명대 수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1세 연령 인구수(80만명대 수준)가 상대적으로 많은 확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재정효과성이 크고,
-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제도에 의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높히 받은 현 세대(1955년생~1974년생)가 미래 자녀세대를 위하여 다소 희생하는 것이 세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